

결 정

2018 - 1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忠淸日報 발행인 이 규 택

주 문

忠淸日報 2017년 12월 21일자 1면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윤곽」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忠淸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사진)과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로 박 전 차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국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20일 전화통화에서 “박 전 차관, 신 전 위원장, 윤 전 고검장 중 박 전 차관이 지사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박 전 차관의 풍부한 도정·행정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충북지사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한국당 입당은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변으로부터 도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정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보도 중요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충북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차관은 지방 국립대(충북대) 출신으로, 행정고시(21회) 합격 후 충북과

관련이 깊은 농수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나름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분류된다.

그는 특히 충북에서 단양군수와 도 내무·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 도청에서 잔뼈가 굵어 지사 업무수행의 최적임자로 꼽힌다.

경제전문가인 신 전 위원장과 검찰 고위직까지 오른 윤 전 고검장도 경쟁력 있는 후보이지만 박 전 차관이 도청 현악 파악과 추진에 남다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박덕흠 도당위원장은 이날 “후보 3명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선을 긋고 “한국당 충북도당 시무식(1월11일)에 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이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충북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최종 후보 1명을 내년 1월 중 당 대표에게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충북도당의 시무식에는 홍준표 당 대표와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때 충북지사 후보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39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忠淸日報의 위 기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한국당의 유력후보로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리드에서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는 박경국, 신용한, 윤갑근 등 3과전으로 압축됐다고 전한 뒤 『당내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로 박(경국) 전(안 전행정부) 차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라며 박 전 차관을 부각시켰다. 기사는 익명의 충북도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차관이 지사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며 『이런 배경에는 박 전 차관의 풍부한 도정·행정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 박 전 차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박 전 차관은 지방 국립대(충북대) 출신으로, 행정고시(21회) 합격 후 충북과 관련이 깊은 농수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나름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분류된다』 는 등 박 전 차관의 경력을 긍정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편집자는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윤곽’」 이라는 큰 제목 밑 작은 제목으로 「박 전차관 유력...도정·행정경험 부각」 이라고 달았다. 또 박 전차관의 사진만 게재했다.

하지만 기사는 박 전 차관을 단독으로 부각시킬 만큼 유력후보라는 데 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다른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인 신 전 위원장과 검찰 고위직 까지 오른 윤 전 고검장』 이라고 짧게 소개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